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Q&A

작성: 대한비뇨의학회 법제위원회 (2023년 6월)

1. 제34조의5(촬영 거부 사유)

법 제38조의2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과 법 제38조의2 제4호의 사유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호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2.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3.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만, 지도전문의는 판단의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5.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6. 천재지변, 통신 장애, 사이버 공격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질의사항] 위 의료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이전 대한비뇨의학회에서 요청한 수술종류가 모두 승인이 되어 이 시행규칙에 근거한 '촬영거부의 사유'에 해당되나요?

(첨부: 대한비뇨의학회에서 대한의사협회로 제출한 의견서 대비뇨 2021-(20)-323호의 불임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특히 1)-1번, 1)-2번, 1)-3번, 3)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답변]

귀 회가 제출하였던 [대비노 2021-(20)-323호] 불임 의건서에 따라 귀 회가 촬영거부의 사유로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기술하였던 수술종류는 ① **불안정한 생체징후에서 시행되는 모든 비뇨의학적 응급수술 또는 시술**, ② **의료인이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촬영을 거부한 경우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영상의 유출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수술**, ③ **남녀 성기 노출 수술 또는 시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응급수술과 관련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응급환자를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은 사실상 대부분의 응급증상을 포함하면서 응급의료종사자(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 등)의 ‘판단’을 명시하고 있는 바, **귀 회가 요청한 “불안정한 생체징후에서 시행되는 모든 비뇨의학적 응급수술 또는 시술”의 경우 촬영거부의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귀 회의 요청사항 중 “의료인이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촬영을 거부한 경우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영상의 유출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수술”은 현재 입법예고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촬영거부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질의하신 상기 사항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가 하위법령에 포함하도록 적극적인 의견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에 관한 의료법상 규정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는 바, 향후 동 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개정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영상의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의 장에게 안정성 확보 조치를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령이

요구하는 안정성 확보 조치의 이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이 유출되는 경우의 책임 문제와는 별개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기술적인 문제로 영상의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의거 촬영을 거부하는 것 또한 법 자체를 형해화시킬 수 있어 촬영거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34조의5 제6호는 촬영거부의 사유로서 “천재지변, 통신 장애, 사이버 공격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바, 이를 근거로 한 촬영거부는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녀 성기 노출 수술 또는 시술”의 경우입니다. 우리협회는 촬영거부의 사유 중 하나로 민감한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경우도 포함되어야 함을 요청하였으나, CCTV 촬영요청 자체가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환자 본인이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면서 촬영을 요청(법률상 피해자의 승낙)하는 것이기에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될 수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즉, 환자가 본인의 민감한 신체부위가 촬영되어 저장되는 것이 싫어서 촬영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의료인이 환자의 노출을 이유로 촬영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제34조의6(녹음의 요청)

- ①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촬영을 요청하고자 하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촬영 시 녹음 기능을 사용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촬영 요청서와 함께 의료기관의 장에게 녹음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에게 녹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질의사항]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주체가 녹음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하지 않아도 되나요?

[대한의사협회 답변]

개정 의료법 제38조의2 제3항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제2항에 따라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환자뿐만 아니라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녹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34조의6(녹음의 요청)은 예외적으로 녹음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3. 제34조의7(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조치로서,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보관시설에 대한 잠금장치 또는 훼손 방지 장치를 구비하는 조치

[질의사항] 의료기관의 장이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지만 전문 해커집단 등과 같은 집단에 의한 영상정보의 누출 및 유포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의사협회 답변]

의료법 제38조의2 제4항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34조의7의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는 의료기관의 의무인 동시에 해당 사항을 이행하였을 경우 이후 발생하는 정보의 누출·유포에 대한 면책 조항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이후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질의사항] 국소마취를 통해 환자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만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도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하나요?

[대한의사협회 답변]

개정 의료법 제38조의2 제1항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자를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은 촬영하여야 하는 영상을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소마취를 통해 환자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만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의 9항

⑨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질의사항1] 이에 따라 시행규칙의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상만 보관하여만 되나요?

[대한의사협회 답변]

개정 의료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법정 보관 기한 30일은 의료기관이 촬영 영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최소 보관기한'을 의미합니다. 즉, 30일이 경과하면 영상에 대한 보관의무가 사라지며, 이후 환자 등이 촬영 영상의 열람 등 요청하였으나 해당 영상의 보관기한이 경과하여 삭제되어 이를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의료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사항2] 30일 이상 보관한 경우 얼마 이내로 삭제해야 하나요?

[대한의사협회 답변]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촬영한 영상을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영상의 삭제와 관련하여 삭제 기한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명시하지 않고 일정부분 의료기관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의료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기한을 정하여 내부 관리계획에 포함하고 이를 이행하면 됩니다.

[질의사항3] 삭제기간과 삭제기간을 놓쳐서 보관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가 있나요?

[대한의사협회 답변]

삭제 기한은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로 내부 관리계획의 일부에 해당되는 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법 제38조의2 제4항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34조의7

(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제4호의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조치로서 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의료기관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한 경과한 영상 삭제라는 조치 미이행 자체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90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삭제하지 않은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에는 법 제88조의2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5(촬영 거부 사유)

법 제38조의2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과 법 제38조의2 제4호의 사유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만, 지도전문의는 판단의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질의사항1] 수련병원에서는 대부분의 수술에 전공의가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참여하는 수술의 경우 위 호 (4호)를 근거로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나요?

[대한의사협회 답변]

의료법 제38조의2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안) 제34조의5 제4호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수술의 경우에도 수련 등을 위해 전공의가 참여하고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수술 장면의 CCTV 촬영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 수련이 필요한 전공의의 수술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으로 수술에 전공의가 참여하고 CCTV 촬영이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도전문의의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질의사항2] '현저히'라는 개념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대한의사협회 답변]

의료법 및 시행규칙(안)에서는 '현저히' 저해할 우려라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현저히'란 법률적인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인바,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결국 문제가 될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주무부처의 유권해석 및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사항3] 현재 임상상황을 고려할 때 전공의와 함께 전임의들도 수술 수련을 위해 수술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위 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대한의사협회 답변]

의료법 전임의의 경우 법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동 조항을 무한히 확장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사실상 모든 CCTV 촬영이 거부될 수 있어 전임의까지 이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사항4] 만약 전공의가 수술에 참여하지만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 전공의가 해당 수술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동의서를 사전에 받아야 하나요? 만약 그 범위가 달라졌다면 술 중에라도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대한의사협회 답변]

질의사항은 CCTV 촬영과 수술동의서를 연계하고 있으나, 이는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24조의2제2항은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특히 제3호는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CTV 촬영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과 같이 의료법에 열거된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수술동의서를 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사항4-1] 이런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자 또는 보호자가 모든 수술을 해당 교수 (집도의)가 진행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술을 거부하더라도 진료거부에 해당하지는 않나요?

[대한의사협회 답변]

CCTV 촬영 여부와 수술동의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기존과 같이 수술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대해 환자가 거부하였을 경우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며,

아울러 의료법 제15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아주 제한적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바 환자의 부동의를 이유로 수술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질의사항1] 위 의료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비용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질의사항2] 비용을 지원받기 전 설치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의사항3] 위 영상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장치 설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대한의사협회 답변]

우리 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한 이후로 보건복지부에 CCTV 설치비용 및 유지·관리비용의 국가 부담을 강력히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CCTV 유지보수 비용이 제외된 설치비용에 대해서만 국비 지원토록 하고, 국비 지원규모로 37억 6700만원을 국회 예산 의결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말부터 각 지자체에서 CCTV 설치비용 지원대상(종합병원을 제외) 해당여부 등을 판단하고자 일선 의료기관에 수술실 현황(수요조사) 파악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협회는 보건복지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올해 2월 CCTV 설치비용 지원 관련 내용을 각 산하단체에 안내(대의협0715-13865, 2023.2.10.)한 바 있습니다. 상기 안내 자료를 살펴보면 ① 비용신청방법, ② 비용 지원 전 설치시 교부금 지원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며, 참고로 금년도 3월로 국고교부금 신청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우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국고교부금 추가 신청 절차를 요청한바 현재 교부금 신청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